

대한상의 ESG 뉴스레터

2023년 4월

전문가 기고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공시,
주체는 기업이어야 한다!

주요 이슈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의 산업계 영향

ESG 동향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종합보고서」 발표

주요 통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정도진 교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공시, 주체는 기업이어야 한다!

ESG 공시의 국제표준을 제정하고 있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올 6월 말 'S1'으로 불리는 「일반적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기준」과 'S2'로 불리는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기준」을 확정·발표한다. 이 공시기준들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며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첫 공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국내에서도 2025년부터 ESG 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ISSB 공시는 지속가능성 관련 기업의 현황을 투자자를 위해 객관적이고 통일된 방식으로 제공해서 투자자와 기업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작년 7월 전 세계 700여 기관들이 제출한 ISSB의 공시안에 대한 의견서에 따르면,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검증가능성도 낮은 정보가 생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서 ISSB도 과도기적 완화(transitional reliefs)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12월 ISSB는 협력사와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Scope 3)의 공시 의무를 최소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그런데 ISSB도 Scope 3의 공시 의무화 원칙 자체는 여전히 견지하고 있듯이, Scope 1·2·3는 점진적인 개념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로 공시돼야 제대로 된 정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단순히 Scope 3를 유예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Scope 3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방법론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이처럼 ISSB의 공시기준은 완결체가 아니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ISSB 공시문제의 심각성을 국제표준이라는 당위성으로 인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탄소배출 측정 국제기관인 OWID에서 지적했듯이, 우리나라는 독보적으로 넷제로(Net Zero)를 달성하기 어려운 나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구 자본시장의 실정에 맞게 표준화된 공시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한국 기업의 공시 부담과 비용은 상상하는 수준을 넘어설 것이다. 무엇보다도 공시의 주체인 기업이 이러한 공시주제를 주도하지 못하다 보니, 오히려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있다. 기업으로서는 공시보다 기후 변화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회는 최대화하는 전략적 접근과 정책적 요구가 우선 강구되어야 하는데, 이보다 투자자의 리스크를 줄이는데 편향되어 있다.

주체가 되어야 할 기업이 그렇지 못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우리는 이미 치렀으며 여전히 경험하고 있다. 2011년 국제표준이라는 당위성 아래 충분하고 면밀한 준비 없이 국제회계기준(IFRS)을 문자 하나 수정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그대로 도입하면서, 도입 초기에는 환율회계기준으로 인해 조선업계의 부채 급증을 경험했고, 최근에는 리스회계기준 변경으로 해운업이 물류대란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으며, 올해부터 적용되는 新보험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보험업계의 과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때도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주체는 기업이 아니었다. 이제 기업 스스로 목소리를 모아 ESG 공시문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ESG 공시기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정확히 분석해서, 요구할 것을 요구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의 산업계 영향



김천구 연구위원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EU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철강, 알루미늄 산업을 중심으로 영향이 예상되므로 정부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①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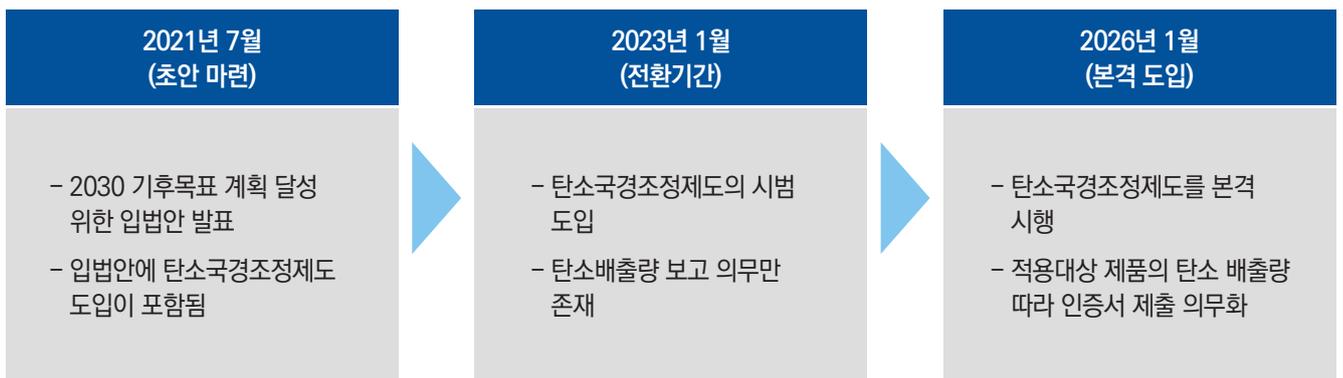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란 기업들이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국가로 생산시설 이전 또는 수입 증가를 통해 탄소배출을 이전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가 도입한 무역관세의 일종이다.

EU집행위원회는 2021년 7월에 온실가스배출을 2030년까지 1990년 배출량 대비 55% 감축을 목표로 하는 입법안(Fit for 55)을 발표하였는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탄소국경제도 도입을 핵심적으로 담았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집권 후 기후변화대응 관련 국제 리더십 확보, 탄소 가격 차이로 생기는 손실 조정의 필요성 등에 공감하며 EU의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EU 및 미국 이외에도 영국, 일본, 캐나다 등 주요국가들도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유사한 제도 도입을 검토중이다.

EU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철강, 전력,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 등 수입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적용시기는 2023년 1월부터 하되 2025년 12월 말까지는 전환기간으로 전환기간에는 보고의무만 존재한다. 하지만 2026년 이후에는 EU로 수입되는 적용대상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따라 인증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향후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대상 제품을 매년 확대해 갈 예정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제품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대상은 각 수입제품과 관련된 직접배출원이며 특정 요건 하에서는 간접배출원도 포함될 예정이다. 생산자가 제출한 배출량 적용을 원칙으로 하나 배출량 측정자료를 미제출 시 당국의 기준값(EU 생산자 하위 10%)이 적용될 것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현황



②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산업 영향과 대응과제

탄소국경제도의 대상이 되는 제품을 EU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제품 가격에 더해지는 관세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각종 행정 부담 증가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산업별로는 철강, 전력,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 등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액은 '22년 기준 383.7억달러인데 이중 약 13.3%인 48.5억달러가 EU로 향하고 있다. 알루미늄의 경우 '22년 기준 수출액은 55억달러이며 EU로의 수출 비중은 9.8%이다. 한편 시멘트, 비료, 전력 등 제품은 해외로 수출되는 비중이 크지 않아 국내 총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국내 품목별 수출점유율을 살펴보면 철강(5.6%)은 반도체(18.9%), 석유제품(9.2%), 석유화학(7.9%), 차부품(7.9%), 일반기계(7.5%)에 이어 여섯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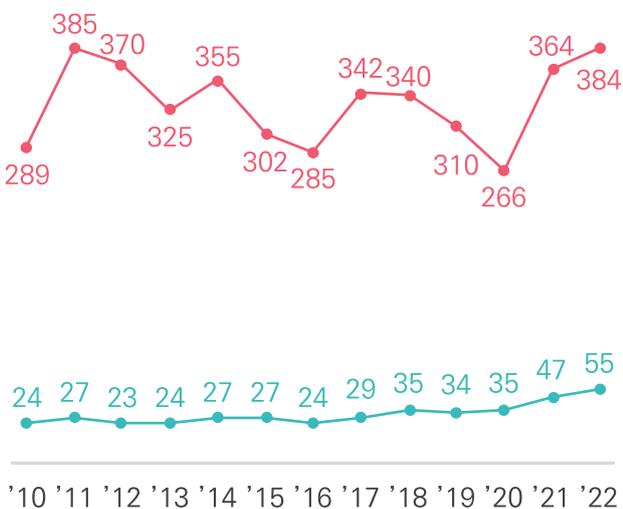
향후 미국 등 여타 국가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이 확산된다면 철강산업 문제일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수출경

쟁력 하락으로 연결될 것이다. 또한 EU는 2034년까지 적용 대상 제품을 매년 늘려나갈 경우 해당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부담은 지속적으로 커질 것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새로운 무역규제로 작용하면서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개별기업 측면에서는 대응이 쉽지 않다. 정부는 기업들이 탄소저감 기술개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탄소국경조정세 대응역량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제품들의 탄소배출량 측정 및 인증을 손쉽게 하기 위한 기초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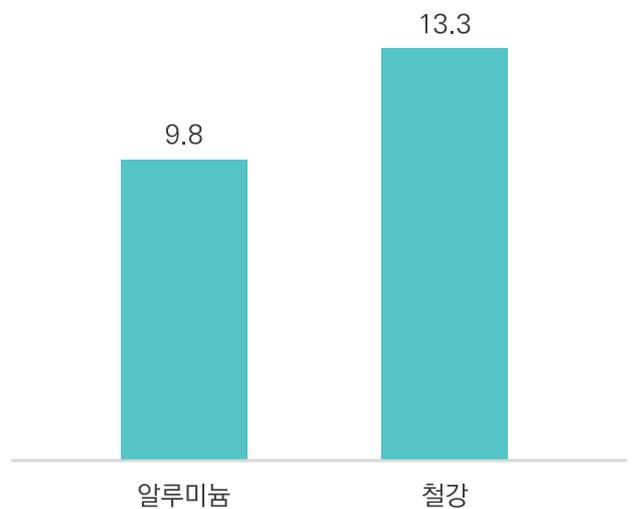
물론 개별기업들도 제품 단위당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해 원재료 입고 시점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탄소배출 공정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 및 증빙서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탄소배출량 관리를 위한 전담팀을 구축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들도 병행해야 한다.

철강·알루미늄의 수출규모 추이 (단위: 억달러)



출처 : 관세청

철강·알루미늄의 對EU 수출 비중 (단위: %)



출처 : 관세청
주 : 품목별로 전체 수출액 대비 EU지역 수출액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6차 평가보고서 종합보고서」 발표



한주연 연구원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지난달 19일 스위스에서 열린 총회에서 통합적인 단기 기후 행동의 시급성을 강조한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종합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IPCC는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규명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IPCC의 평가보고서는 국제사회에서 각종 기후변화 협상을 진행할 때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IPCC는 1990년부터 기후변화 근거와 관련 정책방향을 담은 평가보고서를 5~6년 간격으로 발간해왔다. 2014년 승인된 제5차 평가보고서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 체결에 과학적 근거로 활용됐다. 2014년 5차 보고서를 낸 이후 9년 만에 6차 보고서를 발표했다.

제6차 평가보고서(AR6)는 총 4개*의 보고서로 구성되어있고, 이번에 발표된 종합보고서는 제6차 평가주기(2015~2023년) 동안 발간된 3개의 특별보고서**와 3개의 평가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포괄하여 서술하고 있다.

*실무그룹 보고서(3), 종합보고서(1)
** 지구온난화 1.5℃('18), 기후변화와 토지('19), 해양 및 빙권('19)
***기후변화 과학('21), 기후변화 영향·적응·취약성('22), 기후변화 완화('22)

이 종합보고서는 ① 현황 및 추세, ② 장기 기후변화, 리스크 및 대응, ③ 단기 대응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주요내용은 인간이 초

래한 기후변화의 악영향은 계속해서 점점 더 심해질 것이며, 지구온난화가 증가할 때마다 평균 기후와 극한현상의 지역적 변화는 더 광범위해지고 뚜렷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미래 기후변화는 자연과 인간 시스템 전반에 걸쳐 영향의 심각성을 증가시키고, 지역적 차이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결과를 도출해냈다. 온난화가 심화될 때, 리스크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1.5℃ 또는 2℃ 온난화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즉각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기후탄력적 개발의 이행가능한 기회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나, 기후 행동을 확대할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다며 다양한 시스템의 옵션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종합보고서는 각 국의 정부 대표가 만장일치로 승인한 것으로, 올해 파리협정의 장기 온도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는 체계인 '전지구적 이행점검'을 실시할 때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기후변화 적응 대책 이행에도 중요한 가이드 라인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IPCC 승인 제5-6차 평가보고서 주요 내용 비교

	제5차(2014년)	제6차(2023년)
산업화 이전 대비 전지구 지표온도 변화	0.85℃ (0.65~1.06℃)	1.09℃ (0.95~1.20℃)
인간활동에 의한 온실가스의 온난화 기여도	0.5~1.3℃ (1951~2010년 기준)	1.0~2.0℃ (1850~1900년 평균 대비 2010~2019년 평균의 차이)
총 누적탄소배출량	2,040±310GtCO ₂ (1750~2011년 기준)	2,400±240GtCO ₂ (1850~2019년 기준)
최근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49±4.5GtCO ₂ -eq/연간 (2010년 기준)	59±6.6GtCO ₂ -eq/연간 (2019년 기준)
2081~2100년 전지구 지표온도 상승 범위	1.0~3.7℃ (1986~2005년 평균 대비)	1.4~4.4℃ (1995~2014년 평균 대비)

ESG 통계 지표

2023년 3월 31일 기준

1. ESG 금융

(1) 국내 사회적책임투자채권 발행 종목 수

(단위 : 개)

	'22.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3.1월	2월	3월
녹색채권	183	186	188	199	203	201	200	212	212	213	215	221
사회적채권	871	912	946	966	1,006	1,032	1,045	1,069	1,070	1,083	1,103	1,138
지속가능채권	246	279	304	305	309	308	309	300	299	298	300	299

(2) 국내 사회적책임투자채권 상장 잔액

(단위 : 천억 원)

	'22.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3.1월	2월	3월
녹색채권	183	185	186	191	194	193	193	200	200	201	205	210
사회적채권	1,362	1,400	1,428	1,460	1,523	1,547	1,558	1,586	1,572	1,565	1,576	1,638
지속가능채권	186	199	213	217	220	219	218	213	213	213	213	212

2. ESG 평가

서스틴인베스트 ESG 등급 기업수 분포('22년 하반기 평가 기준)

(단위 : 개사)

합계	AA	A	BB	B
규모등급 기준	78	193	310	214
전체등급 기준	74	150	193	260

* 규모등급: 자산 규모별 ESG 차등평가로 규모가 클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등급 기준

** 전체등급: 모든 기업에 동일한 절대기준을 토대로 ESG평가한 등급 기준

3. 기타 통계

우리나라 및 세계 평균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 비교

구분	한국(안면도 기준)			세계평균(세계기상기구 기준)		
	CO ₂ * [ppm]	CH ₄ ** [ppm]	N ₂ O*** [ppm]	CO ₂ [ppm]	CH ₄ [ppm]	N ₂ O [ppm]
'21년 평균	423.1	2,005	336.1	415.7	1,908	334.5
10년 평균 증가율(%)	2.7	10	1.2	2.5	9.2	1.0

* CO₂ : 이산화탄소 ** CH₄ : 메탄 *** N₂O : 아산화질소

자료: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

2023년 ESG 뉴스레터 이슈 주제

1월 공정전환(Just transition)의 동향과 시사점	7월 기업의 탄소배출 정보 고시 해외 논의 동향
2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 기후 금융의 역할	8월 탄소의 사회적 비용 추정과 활용방안
3월 탄소배출 MRV(측정·보고·검증) 분야의 성장과 그 의미	9월 탄소중립 분야 국가 R&D 현황 및 과제
4월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의 산업계 영향	10월 배출권거래제 쟁점과 개선과제
5월 RE100 추진 현황과 과제	11월 ESG 기업 공시 의무화 현황과 대응방안
6월 지속가능금융 현황 및 발전 과제	12월 UN기후변화협약 결과와 의미

※ 상기 주제는 상황 변화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 및 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SGI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의 산업계 영향

김천구 연구위원
T. (02)6050-3140 | E. ck1009@korcham.net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종합보고서」 발표

한주연 연구원
T. (02)6050-3143 | E. jooyeon@korcham.net

ESG 통계 지표

박현준 연구원
T. (02)6050-3139 | E. parkhj@korcham.net